



KINU 정책제안서 12-07

#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지역 및 주변국 차원

## 정책제안서(12-07)

인쇄 2012년 11월 발행 2012년 11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통일정책연구센터 기획·디자인 인쇄처 두일디자인(2285-0936)

등록 제2-02361호(97.4.23) 주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화 900-4300(대표) 901-2523(직통) 팩시밀리 901-2543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통일연구원, 2012

비매품

# 정책제안서

##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지역 및 주변국 차원

연구책임자: 박종철(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고봉준(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부원장)

김성진(덕성여자대학교 부교수)

박영준(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신상진(광운대학교 교수)

이승주(중앙대학교 교수)

황기식(동아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1. 배경 및 문제점 .....	1
2. 주요 연구결과 .....	4
가. 통일한국에 대한 미국의 우려해소와 편익 .....	4
나. 통일한국에 대한 중국의 우려해소와 편익 .....	5
다. 통일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려해소와 편익 .....	7
라. 통일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해소와 편익 .....	8
3. 정책제언 .....	9
가. 제안 1: 통일외교의 기본방향 .....	9
나. 제안 2: 대미 통일외교의 주안점 .....	14
다. 제안 3: 대중 통일외교의 주안점 .....	16
라. 제안 4: 대일 통일외교의 주안점 .....	18
마. 제안 5: 대러 통일외교의 주안점 .....	19
바. 제안 6: 공공외교의 기본방향 .....	21
4. 기대효과 .....	24
참고자료 .....	26



## 1. 배경 및 문제점

본 연구의 목적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이해와 우려, 그리고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에 가져다줄 수 있는 편익을 분석함으로써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통일의 이익을 강조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보다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찾는 데 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막연한 낙관론에도 한반도는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여전히 분단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긴장이 완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한반도 문제는 북핵문제와 6자회담에서와 같이 향후 동북아 질서 재편을 촉발하는 문제이다. 더욱이 동아시아지역에서는 영토분쟁과 같은 전통적인 분쟁이 격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가들의 정치·경제·군사적 경쟁이 진행되면서 한반도 통일에 우호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의 현상타파는 주변국의 이해관계에 예측이 어려운 변화, 혹은 예측 가능하지만 특정 국가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한반도의 현상유지에 대한 지지를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반도 통일의 비전을 제시하고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분석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에도 한반도 통일과 주변국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체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과 역량(혹은 영향력), 그리고 한반도 정책이나 상호 간의 정책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1)</sup> 국가이익이 무엇인가, 국가이익은 합리적으로 계상될 수 있는 것인가, 국가의 정책은 반드시 국가이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결정되는가 등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대외정책의 결정 과정은 국가이익의 추구하고정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인식과 이해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변국의 이익(절대이익이나 상대적 이익)이나 손실(혹은 우려)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는 많지 않다.

1)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과 이해관계에 대한 최근 연구로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여인곤 외,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력 협력 강화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9); 김성철 편, 『외교환경과 한반도』 (성남: 세종연구소, 2009); 배정호 외,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0).

현실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따른 동아시아 차원의 지역적 편익과 주변국가들의 편익을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무엇보다 통일의 유형이나 과정, 통일 시점이나 통일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세계질서 및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 그리고 주변국 관계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정확한 편익이 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한계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회피되어 왔다. 통일 편익의 분석에서도 통일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다양한 통일 과정 및 통일 후 국가형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의 타당성에도 국가 이익, 특히 사활적 국가이익은 국내외 환경의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통일 과정에 대한 시나리오를 고려하기보다는 변수로 고려하기 어려운 변화를 ‘전제’나 ‘조건’으로 고정함으로써 주어진 조건에서의 편익을 산정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있지만 한반도 통일의 편익 분석은 주변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 제시나 설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큰 연구가 될 수 있으며, 한반도 통일 편익의 분석은 한반도 통일이라는 변화가 주변국의 국가 이익에 얼마나 부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주변국의 우려와 손실을 상쇄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설득과 유인책을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통일한국의 편익에 대한 연구는 다음 세 가지 차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통일한국이 한반도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주변국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일한국으로 인해 주변국이 겪을 수도 있는 불이익이나 비용을 완화, 혹은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일한국으로 인해 초래되는 이익과 불이익 또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익이 불이익을 상회한다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통일한국의 비전을 주변국에게 설득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통일한국으로 인해 초래되는 이익의 크기에 대해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통일한국이 자국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해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주변국들로부터 협력을 구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한국은 통일한국의 실현과정과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주변국에 대해 제시하는 이익을 구체화할수록, 주변국들로부터 협력을 구하는 일이 용이해질 것이다. 현 시점의 협력이

통일한국을 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역으로 미래 통일한국의 미래를 구체화한 비전이 현 시점의 협력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둘째, 이익과 비용 또는 손실 사이의 관계이다. 주변국들이 통일한국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향유하는 데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문제는 주변국들이 통일한국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보다 손실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다. 전망이론(prospect theory)에 의하면 국가는 자신의 권력 또는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권력과 이익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는 데 더 적극적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현상 유지 경향을 강하게 보인다는 것이다.<sup>2)</sup> 이에 따르면 통일한국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크더라도 그보다 작은 손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변국들은 통일한국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통일한국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 못지않게, 주변국들이 가질 수 있는 손실 또는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이를 해소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이익과 비용 또는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일한국의 편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주변국들이 통일한국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 가운데 하나만을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통일한국이 자신들에게 손실보다는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임을 주변국들이 확신할 수 있을 때, 통일한국의 비전은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은 주변국들에 대하여 통일한국의 이익은 구체화하고 손실 또는 비용은 최대한 완화하는 노력을 하여 편익의 크기를 최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국제정치학에 적용된 전망이론의 개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Jack S. Levy, "Loss Aversion, Framing, and Bargaining: The Implications of Prospect Theory for International Conflict,"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7, No. 2 (April 1996), pp. 178~195.

## 2. 주요 연구결과

### 가. 통일한국에 대한 미국의 우려해소와 편익

미국은 자국의 한계를 고려하여 증대되는 동아시아의 경제력에 부합하도록 지역 맞춤형 억지 체제를 고안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해당지역 동맹국과 파트너가 과거보다는 더 큰 책임을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아울러 21세기 국제질서는 정보혁명과 세계화의 심화 결과, 복합화, 분산, 다중심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네트워크적인 연결성이 또 다른 권력의 자원이 될 수밖에 없다. 국제관계의 다른 행위자들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혹은 얼마나 좋은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활용하는지가 국력의 새로운 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질서 속에서는 다른 행위자들과 많은 연결을 갖는 국가가 중심적 행위자가 되고 의제 설정의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 2012년 서울핵안보정상회의의 사례처럼, 중요한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통일한국이 미국에 제공할 수 있는 편익은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개방된 질서로서 그러한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배제될수록 국가의 역량은 제한되기 때문에, 통일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 끼인 새우가 아니라 중개자로서 지역의 안정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관계의 구도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현존하는 안보 질서는 근대적 모습인 다허브형 네트워크, 탈근대적인 탈허브형 네트워크, 미국이 주도하는 제국적인 단허브형 네트워크로 대표되고 있다. 이런 복합적인 네트워크의 질서 속에서 통일한국의 적절한 역할을 찾고 가능한 구조적 공백을 메워 주는 중개자의 역할을 구축하는 것이 통일외교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핵심 또는 중요이익에 통일한국이 편익을 제공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다. 이미 한국은 미국식 민주주의의 거의 유일한 성공적 이식사례로서, 또한 미국의 도움을 통해 원조수혜국에서 원조제공국으로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지속하고 세계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지역 내에서 미국의 대중관계라는 차원에서 규정되는 미국의 핵심적 이익에의 편익 제공은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과 역풍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여기에는 중국이라는 한국의 사회적 변수에 대한 동시

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남아있는 가장 큰 쟁점은 통일한국과 관련하여 미·중 간의 이익 충돌을 회피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이다. 즉 통일한국으로 공고화할 한·미·일 공조 체제가 대중 봉쇄가 아니라는 점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이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 실마리는 위에서 언급한 인식공동체의 범위와 내용을 확장시키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사활적 이익 또는 안보의 문제는 현재의 주권국가들로서는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포괄적인 인식공동체 내에서 통일한국이 미국만이 아니라 주변국가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익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최소한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그 기반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 나. 통일한국에 대한 중국의 우려해소와 편익

정치·안보 분야에서 중국의 사활적 국익은 국가와 영토주권 수호, 사회주의체제 유지 그리고 국가안보 유지다. 중국의 핵심적 정치·안보이익은 남사군도와 조어도 및 서해에 대한 영유권·영향력 확보,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유지, 해외주재 중국인 보호 및 민족통합이며, 북한문제와 한반도 통일문제도 중국의 핵심 국가이익에 포함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지속적 경제발전을 사활적 이익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자원의 안정적 확보, 해외 중국자산 보호 및 해외시장 개척을 경제분야의 핵심 국익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개혁·개방의 진전에 따라 중국사회가 다원화하면서 사회통합과 안정유지를 핵심 국익으로 설정하고 있다.

정치·안보적 차원에서 중국은 북한의 붕괴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중국의 사활적 이익과 핵심적 이익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한반도의 조기 통일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도록 하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바라고 미·중관계가 갈등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점도 중국으로 하여금 한반도 통일보다 분단의 안정적 관리를 선호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논리를 설파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렇지만, 중국이 경제발전을 핵심 국가이익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에 의한 한반도 평화통일이 중국의 지속적 경제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가 중국에서 제

기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한반도의 통일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반드시 저해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유도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중국의 경제·사회 안정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와 통일 이후 미군이 북한 영내까지 배치될 가능성이다. 중국은 북한과 긴 국경선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중국 동북지역 안정과 발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지속되고 주한미군이 북한지역에까지 배치될 것을 우려한다. 통일한국이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제기할 가능성과 중국에 정치민주화 바람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우려사항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동맹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안심시키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이 지역 다자안보협력을 통해 역내 안정과 평화유지에 적극 진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6자회담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6자회담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로 발전시키는 것도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통일한국이 중국에게 가져다 줄 편익은 정치·안보영역보다는 경제분야에서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의 경제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이다. 더욱이 한반도 통일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중국 동북지역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중국이 바라는 동북아지역 경제통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에게 비용보다는 편익을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한반도 통일은 탈북자의 중국 유입을 차단하고 중국사회 안정과 문화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우려사항을 해소하고 통일한국이 중국에게 제공하게 될 편익을 논리적으로 제시해야만 중국을 한반도 통일 지지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 한반도 조기 통일보다는 분단의 안정적 관리를 선호하고 있는 만큼, 우선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안보적으로는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더라도 한·미동맹이 중국을 겨냥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고, 동북아 다자 경제·안보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역내 문제가 군사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한·중 간 정치·안보적 불신을

제거하고 신뢰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고 지지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관계가 안정될수록 중국은 한반도 통일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 등 주변 강대국의 개입과 간섭을 약화시키고 한민족 주도 아래 통일을 실현하기가 용이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한국에 대한 중국의 지지 확보를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중국 대중을 상대로 한 공공외교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2008년 한·중이 합의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하여 정치·안보 신뢰관계를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며, 북한문제에 대한 소통과 협력 증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지방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여론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을 겨냥한 공공외교를 비중 있게 전개해야 할 것이다.

## 다. 통일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려해소와 편익

우리 사회에서는 일본이 한반도 통일에 의해 등장하게 될 강력한 통일한국에 부담을 갖고 있을 것이며, 따라서 한반도 통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볼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또한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일본이 기여하게 될 역할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의 협력을 조달받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도 있는 듯 하다. 이 글은 후자의 관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의 관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하며,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일본으로부터의 협력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이 일본의 국가이익에도 부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일본은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자국의 안보, 경제적 번영, 자유와 인권 등 시민사회의 가치 유지 등을 핵심적 국가이익으로 간주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중국과 북한 등의 군사적 위협 감소, 동아시아 지역 사회에서 경제적 교류 확대, 일본의 소프트파워 증진 등을 또한 중요한 국가이익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국가이익을 전제로 할 때, 한국 주도에 의한 한반도 통일은 일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자신들의 국가이익을 증진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일본의 정책결정자 및 식자들이 이러한 점을 제기하고 있다. 단 일본의 식자 및 정책결정자들은 한반도 통일이 북한이 아닌 한국 주도에 의해서 진행될 때, 그리고 통일 이후에 통일이한국이 한·미동맹 및 한·미·일 정책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핵보유가 아닌 비핵평화국가의 길을 선택할 때, 일본으로서도 환영할 만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한국 주도에 의한 통일 이후 통일이한국이 중국에 기울거나,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에는 오히려 일본의 국가이익에 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주도에 의한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으로부터의 협력을 얻고자 한다면, 이러한 일본의 국가이익 관념을 고려하면서, 대일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즉 통일이한국의 등장 이후에도 한국은 한·미동맹 및 일본과의 협력 정책을 지속할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어떤 형태로든 일본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국 주도에 의한 통일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없애게 됨으로써, 일본에 상당한 안보상의 국가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는 점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대한 경제개발 계획의 추진은 자본과 기술을 가진 일본의 경제를 위해서도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이한국이 극단의 내셔널리즘을 신중하게 회피할 것이라는 점도 설명하여, 일본이 통일이한국 출현 이후 우려하는 한국 내셔널리즘의 분출 가능성을 억제하려 한다는 우리의 입장도 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일 정책은 정부와 정부 간의 양자 간 대화, 혹은 일본을 포함한 복수의 국가들이 참가하는 다자간 외교 대화를 통해 일본에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학계, 언론계가 참가하는 한·일 간의 1.5 레벨이나 2 레벨의 중층적 대화채널을 통해서도 일본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일본이 기여하게 될 역할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국 주도에 의한 통일이 주변국 모두로부터 협력을 조달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본이 생각하는 국가이익을 염두에 넣으면서, 대일 통일정책을 신중하게 구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라. 통일이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해소와 편익

한반도 통일과 통일이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는 핵무장을 한 통일이한국이 반러

미국동맹에 잔류하는 상태로 통일되는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이 과정에서 진행될 동북아 질서의 재편과정 혹은 그 역의 과정에서 러시아가 배제된 채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발전은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강화나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 그리고 지역협력 강화 등 러시아의 주요 국익과 상충되는 것이다. 러시아는 또한 경제적으로는 급속한 통일 과정의 진행에 따른 통일비용의 전가를,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난민의 발생 등 사회불안 요인의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우려는 다음과 같은 편익의 제시를 통해 완화 혹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화는 동북아질서의 일방적 재편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6자회담에서와 같이 러시아 역시 스스로 통일 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으로도 통일비용은 통일한국의 시장형성으로 상쇄될 수 있거나 정치적 요인으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대규모 협력사업의 진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은 점진적 통일 과정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는 통일비용을 줄이거나 상쇄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한반도 통일은 러시아 극동지역에도 사회적 공공재의 제공을 통해 사회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사회안정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인구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러시아의 한반도 통일이나 통일한국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러시아의 정책우선 순위에서 한국과 한반도 문제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중요성이 낮을 경우 통일 과정에서 러시아가 자신들의 동북아에서의 이해관계나 타지역에서의 이익을 반대급부로 한반도에서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우리의 이해와 다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한·러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보다 다원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반도 통일과 통일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여야 할 것이다.

### 3. 정책제언

#### 가. 제안 1: 통일외교의 기본방향

개별국가에 대한 통일외교를 분석하는 경우 환경으로서의 국제정세의 변화와 남북한관계, 그리고 쌍무관계 차원에서의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으로는 한반도 주변 국가들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렵다. 이는 한반도에 대해 개별국가가 독자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지역적 차원의 편익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거나 다른 국가들의 입장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충 가능성에도 한반도 주변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비핵화 등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합의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일관되고 지속적인 한반도 통일외교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국 이익의 교집합 및 통일편익의 총합을 증가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상충될 수 있는 개별국들의 이익을 조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미·중·일·러에 대한 정책 가운데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책은 ① 다자주의적 협력의 강화, ② 통일편익의 규모 확대를 위한 경제협력의 증진 및 이익 교집합의 다양화와 이러한 편익의 적극적인 제시와 설득, ③ 정부 간, 민간, 그리고 1.5트랙의 협력 네트워크 다원화 및 다층화, 그리고 ④ 한반도 통일의 편익에 대한 이해와 통일한국 및 동아시아의 비전 확산을 위한 공공외교의 강조이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과 같이 통일과 관련해 의견이 양분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에 대해서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입장을 표명할 필요도 있다. 특히 전망이론에서의 논의와 같이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해서 주변국들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통일의 이익보다는 현재적인 불확실성의 증가와 직접적인 부담과 손실을 우려해 한반도 통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편익의 설득과 함께 손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 점진적 통일 등의 기본전제 하에 한·미동맹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해관계가 얽힌 개별국과의 미세조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포괄적인 원칙을 마련해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미·일·중·러에 대한 통일정책 가운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은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다자주의 협력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다자주의적 접근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등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정책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 다자주의 접근이 적용될 경우, 개별 국가는 다자주의 접근에 참여함으로써 자국의 국가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할 것이다. 또한 다자주의적 접근은 개별 국가의 이익 표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접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주의나 경제협력을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은

세력경쟁을 목표로 할 경우 ‘블록 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TPP나 FTA에 기초한 중국의 ‘ASEAN+3’, 그리고 러시아의 동아시아 에너지 레짐 구축 노력 등은 역내갈등의 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경제, 러시아의 아시아 복귀, 일본의 군사력 증강, 북핵문제, 역사문제와 영토 문제 등 동아시아 전반의 분위기는 경쟁·갈등의 심화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구체적이고 협소한 이익보다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의 천명을 통해 주변국의 이해갈등의 절충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한국의 조정자 역할은 통일 이후 통일과제의 부담이 해소되고 역량이 강화되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 이전 상황에서도 한국은 미국의 오랜 안보 파트너이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교역이 가장 활발한 국가 가운데 하나라는 위상 등을 고려할 때 미·중의 경쟁적 ‘다자주의 구도’ 사이에서 현실적인 조율을 할 수 있는 국가이다.

둘째, 통일외교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통일 편익의 규모 확대를 위한 경제협력의 증진과 이익 교집합의 다양화, 그리고 이러한 편익의 적극적인 제시를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와 협력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통일의 편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제도적 접근과 함께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일의 편익은 정치·안보,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통일한국이 한반도 주변국에 어떠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편익이 향후 통일한국으로 인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는 불이익이나 비용을 어떻게 완화하거나 해소할 수 있을지를 보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편익은 개별국가의 관심이나 이익의 비대칭성에도 지역적으로 혹은 쌍무관계를 통해 증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통일에 보다 우호적인 환경의 조성과 주변국의 협력을 얻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됨으로써 오히려 조정자로서의 지위나 역할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보다 실질적이고 균형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일외교의 기반은 다자간 혹은 쌍무관계의 발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동아시아에는 많은 지역적 아키텍처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키텍처에도 지역협력이나 쌍무관계에서의 네트워크에는 편차가 크다. 예를 들어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비교적 광범위하고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의 동맹관계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네트워크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선언했지만 여

전히 다양하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북한과 소비에트 시기의 경험을 공유하는 학자나 관료층 가운데에는 북한의 정책이나 입장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정책우선순위가 낮은 한반도 관련 정책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한반도 문제와 통일의 편익을 설득하려는 노력과 함께 이들의 입장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통일외교의 과정에서는 소수의 동북아 혹은 한반도 전문가, 특히 고위직급자나 정부 내 인사를 중심으로 포괄적이고 대규모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인적교류의 창을 넓히는 효과가 있으나, 여전히 네트워크의 다원화에 기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통일외교를 정부, 민간, 그리고 1.5 트랙의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하면서 협력 네트워크를 다원화하고 수직적으로도 확대하는 등 소규모의 다원화된 네트워크를 다층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통일문제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이미 작동하고 있는 기존의 네트워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동아시아에서 작동되고 있는 정부 간 대화채널인 ARF 및 북핵 6자회담은 트랙 1의 네트워크로, 그리고 NEACD와 CSCAP 등의 2 트랙 네트워크는 나름대로 작동이 되는 상태에서 이 두 트랙을 연결하는 1.5 트랙의 네트워킹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원을 획득·강화하기 위한 공공외교의 추진이다. 정부 간 접근도 중요하지만 개별국가들 모두 공공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 자국의 이해를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맥락이기는 하지만 공공외교의 필요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분단의 비용과 통일의 편익, 통일한국의 비전, 그리고 나아가 동아시아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공외교의 수단과 내용에는 개별국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중, 미·러 간의 갈등 시 한국의 통일정책이 가지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는 문제는 공통적으로 추진될 사안이다.

이들 국가들의 경우 시민사회의 활동이나 여론의 기능, 그리고 한국이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이나 러시아는 공공외교에 대한 강조에도 해외 시민단체의 자국 내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민에 대한 외국정부의 접근을 국내정치의 불안정을 촉발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도의 차이

는 있겠지만 러시아의 경우와 같이 한국 자체의 위상과 이미지,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가 낮은 국가의 경우 한국의 존재감과 한반도 통일문제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에도 타국의 공공외교를 국내정치적 불안정 요인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자국민에 대한 외국 정부의 접근을 국내정치적 불안정을 촉발하는 것으로 인식하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개별국과의 쌍무관계를 통해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한반도 통일 관련 외국어 자료를 제작·공급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외교의 기본방향 가운데 또 다른 측면은 한반도 통일이나 통일한국의 등장에 따른 부담이나 우려를 불식시키는 일이다. 이는 편익을 통해 상쇄될 수도 있으나 미래불확실성이나 장단기적 손실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반도 통일의 부담 가운데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은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미동맹의 강화와 한국 주도의 통일 시 미국의 영향이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이다. 특히 중국은 한·미·일 군사협력의 강화를 중국의 포위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2008년 5월 중국은 한·미동맹을 비판하기도 하였다.<sup>3)</sup>

한·미동맹의 문제는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이해갈등을 반영하고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한반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강대국 간의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는 미·중관계에서 비롯된 부분과 접경지의 외세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의 양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한·미 동맹관계에서 본다면 안보의 현실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다만 미국도 다양한 지도력 행사의 유형을 수용하고자 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의 성격도 현실적으로는 동아시아 안보상황의 전개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미동맹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안보목표의 달성으로 그 목적을 천명하고, 중국이나 러시아 접경까지 주한미군이 전진배치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선의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한미군의 경우 한국의 무장과 독자적인 군사력 사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을 우려하는 주변국 역시 노

3) “2008년 5월 27일 外交部發言人秦剛舉行例行記者會,” <<http://www.mfa.gov.cn/chn/gxh/tyb/fyrbt/jzhsl/t458969.htm>> (검색일: 2012.7.25).

력해야 할 문제임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주변국의 우려와 관련해 한·미동맹 문제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통일과 남북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의 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교체시기마다 다소 다른 정책을 추진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초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교체 속에서도 지속될 수 있는 기본원칙의 천명은 불필요한 경계나 우려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통일에 대한 기본적 합의는 한반도 주변국가들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한반도 내부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먼저 달성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통일비용의 감소와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 점진적 통일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져 있는 듯하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천명된 원칙일 뿐만 아니라 IAEA와의 협력을 통해 이미 제도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다. 북핵문제의 해결과정은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남북관계의 개선이다. 북한의 도발과 남북관계 악화, 그리고 국제적 긴장 고조는 미·중, 미·러관계의 긴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동맹과 한국주도의 통일은 중·러의 입장에서 본다면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남북관계의 악화는 한·중관계나 미·중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악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중국이나 러시아의 경우 북한의 주권존중이라는 공식적 입장 표명과 별개로 대북관계에서 실질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음을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나. 제안 2: 대미 통일외교의 주안점

원론적인 수준에서 한·미 양국 간에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도 미·중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안정적 안보 환경을 원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관점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공통의 이익을 도출할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채널에서의 대처라는 관점에서 미국의 역할을 활용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다.

미국에 대한 통일외교의 방향은 미국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추가적인 편익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

한 외교가 결과적으로 대중 압박의 형태 또는 중국의 핵심적 이익에 배치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향후 5~10년간은 부상하는 중국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입장을 강화할 수밖에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일방적인 상황의 진전이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양극적 대결 구도의 형성은 원하지 않는 대립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미국의 힘의 상대적 쇠퇴가 예상보다 더 급하게 이뤄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근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안정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이지만, 양국 모두 냉전적 대결보다는 전향적인 양자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이해가 합치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안보적으로 미국의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의 전제 조건이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과 의무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기가 힘든 부분이고, 결국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국제적 협력의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중국의 경제적 이해가 크게 상충되지 않는 지역적 메커니즘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결국 배타적인 TPP가 아니라 중국적 ‘ASEAN+ $\alpha$ ’의 메커니즘을 포괄할 수 있는 제도화와 개방적인 경제협력 프로젝트 추진으로 이해의 상충을 피하고 편익의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이익의 교집합을 다양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회문화적으로도 미국적 가치의 일방적 확산이라는 느낌이 부각되지 않도록 대미 공공외교와 병행하여 대중 공공외교도 다양한 통로를 통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에 대한 통일외교는 다층적·복합적 네트워크를 통해 준비될 수밖에 없다. 우선 정부 차원의 트랙 1과 민간 차원의 트랙 2, 그리고 반민·반관의 트랙 1.5를 통합하여 다자협력 네트워크를 다층적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지역 내에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동맹의 기제와 초국가적 위협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주의 협력 네트워크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아울러 통일외교를 추진함에 있어서 안보의 현실적 기반인 한·미동맹과 일본과의 협력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동시에 역내의 역동성과 잠재적 요인을 무시한 채 지나치게 미국에 편승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느슨한 제도화를 도모하는 방식이 현실적이고 유용할 수 있다.<sup>4)</sup>

### 다. 제안 3: 대중 통일외교의 주안점

국제적으로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고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정치·경제적 혼란을 겪고 있음에도 북한이 붕괴되지 않고 존속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중국의 대북 지원과 지지 때문이다. 중국이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여 동북아 및 세계무대에서 정치·안보적 영향력을 급속도로 강화하고 있어 북한의 생존을 연장시켜 주는 버팀목 역할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동북아와 한반도에서는 아직도 냉전체제의 유산이 적지 않게 남아 있고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국력 증가는 북한의 생명줄을 연장시키고 한반도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 주도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내 통일기반 조성 노력 이외에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중국이 독자적으로 추구하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동북아 국제질서에 근본적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으로 하여금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도록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키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이 중국에 대해 일차적으로 유의해야 할 정책 고려사항은 중국이 한반도 통일문제에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중국에게 적대적인 국가가 아니며 통일 이후에도 중국의 국익을 저해하는 국가가 되지 않을 것임을 확고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미 기본방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한·미동맹이 명백하게 중국을 겨냥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동북아 다자안보·경제협력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역내 문제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미국이 아·태지역을 포괄하는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에 적극적 관심을 보이고 있고 중국도 지역 다자안보·경제협력을 통해 미국의 개입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록 양자의 입장이 갈등적이

4) 여기서 ‘느슨한 제도화’란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비공식적 제도’(informal institution)와 비슷한 개념이다. 정치학에서 논의되는 ‘비공식적 제도’는 실제적 기구의 수립 또는 법제화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성문화된 규칙이나 제도와는 별도로 정치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인과 제한요소들을 일반적으로 지칭한다. 이에 대해서는 Gretchen Helmke and Steven Levitsky, “Informal Institutions and Comparative Politics: A Research Agenda,” *Perspective on Politics*, Vol. 2, No. 4 (December 2004), pp. 725~740 참조. 이 글에서는 ‘느슨한 제도화’를 ‘비공식적 제도’와 유사한 맥락에서 성문화된 규칙 또는 강제적 조항 없이 협력의 일상화 또는 안정화를 추구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데에 사용한다.

긴 하지만 한국이 다자협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부정적 시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 중국이 가지고 있는 큰 우려는 주한미군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통일 후 주한미군이 중국 접경지역 부근까지 전진 배치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를 중국에게 전달해야 하며, 한국이 미·일과 군사협력을 통해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독자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중국은 영토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한국이 중국과 북한 간 변계조약을 준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반대를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유지를 사활적 국익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한국은 통일한국의 등장이 중국 사회주의 체제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도 유의해야 한다.

중국의 이러한 우려를 완화 혹은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한반도 통일이 안보적 차원에서도 중국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다는 점을 제시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이 중국 주변지역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미·중 간 대립을 완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게 가져다 줄 가시적인 편익은 경제·통상분야에서 찾을 수 있다. 한반도 통일은 한·중 경제협력관계의 심화와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발전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 역시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게 편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려와 반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남북관계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sup>5)</sup>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면서 북한에 대해 강경정책을 채택할 경우 중국은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및 통일노력을 지지하지 않을 가

5) 중국 외교학원의 공샤오펑 교수는 한·중관계의 미래는 남북관계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宮小朋, “中韓關係取決於朝韓關係,” <<http://opinion.huanqiu.com/roll/2012-01/2353334.html>> (검색일: 2012.1.13).

능성이 높다. 국내 여론을 고려할 때에도 핵무기를 가진 북한에 대해 화해·협력정책을 전개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남북관계가 안정될수록 중국은 한반도 통일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sup>6)</sup> 이는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 등 주변국의 개입과 간섭을 약화·배제시킬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 라. 제안 4: 대일 통일외교의 주안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의 우려는 일본의 ‘정상국가화’의 과정과 연계되어 설명될 수 있으며, 다른 일부는 전후 보상문제와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해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인식되면서도 내부적으로 역사문제와 일본의 영토적 요구 등으로 인해 갈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일본에 대한 통일외교는 통일의 기본원칙의 전달, 대북정책 공조, 그리고 이러한 정책공조를 통해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기반 강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sup>7)</sup>

일본에 대한 통일외교는 한·일관계의 현안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한반도 통일이 점진적이고 한국주도로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것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 그리고 무역상대국의 번영, 그리고 국제분쟁 예방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국익과 일치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이나 통일한국의 비전에 대한 기본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지에도 통일한국의 친중정책 가능성, 통일 후 대북 경제지원 규모 확대 가능성, 그리고 한민족 민족주의의 고양에 따른 ‘일본 때리기’(Japan bashing)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기본적으로 통일비전에 대한 지지확대와 분쟁의 다자주의적·평화적 해결 천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국가이익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이익만큼이나 차별성이 있으며, 이러한 이익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 역사적 인식, 그리고 영토적 요구에서 기인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한·일관계에

6) 汪偉民·李辛, “美韓同盟再定義與韓國的戰略選擇: 進程與爭論,” p. 124.

7) 이와 관련하여 ‘신북방정책’이나 ‘21세기 북방정책’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이들 정책의 개략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배명복, “제2의 북방정책 필요하다,” 『중앙일보』, 2011년 6월 29일; 김영희 대기자, “푸틴의 동방정책, 황금같은 기회다,” 『중앙일보』, 2012년 7월 13일자 칼럼 등 참조.

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중·일관계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는 통일문제와는 다소 분리하여 고려될 문제임을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통일한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정책을 취할 것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도 통일한국으로 편익을 가질 수 있다. 한반도 통일 비전에 대해 일본이 편익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일본과의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설득하고, 우리의 통일정책을 지원하게끔 외교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과 일본 간에는 정부 간의 다양한 정책협의 채널이 가동되고 있고, 정부뿐만 아니라 경제계, 학계, 지자체, 문화단체 등 다양한 시민사회 간 협력과 협의채널이 가동되고 있다, 이같은 다양한 협의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와 필요한 협력 방안을 일본에 전하면서, 일본을 통일한국 구현을 위한 전략적 협력자로 만들 필요가 있다.

#### 마. 제안 5: 대러 통일외교의 주안점

러시아에 대한 통일외교에서는 한반도 통일과 통일한국의 비전에 대한 제시와 지지를 위한 설득 이전에 러시아 내 한국의 존재감 제고, 수평적·수직적 네트워크의 확대·심화, 그리고 경제협력사업의 실효성 제고 등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통일과 통일한국과의 경험 확대 등을 표방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통일 과정에서의 전략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그동안 한반도 통일문제가 러시아의 외교정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첫째, 러시아에 대한 통일외교는 러시아에 대한 우선순위의 격상과 러시아 내 한국의 존재감 제고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한·러관계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각자의 필요와 역량에 비해 서로에 대한 외교정책상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러시아의 역할이나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이 과소평가되어왔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이나 중국의 영향력에 비해 러시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보다 더 큰 문제는 러시아 내 한국의 존재감 역시 제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국내연구에서는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 및 유라시아적 속성에 대한 언급을 강조하지만 러시아의 외교

문서와 학자들, 그리고 유럽 러시아 지역의 일반 대중 속에서 한반도와 한국의 위상이나 정책적 우선순위는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둘째, 러시아 내 한반도와 한국의 정책적 우선순위 제고를 위해서는 정치·경제·학술 중심 교류에서 문화·예술·언론 교류 등 교류 영역 전반에서 고른 확대, 즉 수평적 네트워크의 확대가 필요하다. 한·러 네트워크는 냉전기의 역사적 단절로 서방국가와의 교류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취약하다. 체제의 특성상 실효성 있는 네트워크의 발전이 어려운 영역도 있을 수 있으나, 역으로 이러한 영역에서 한국의 경험이 러시아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상호협력의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확산은 결과적으로 상호이해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대체로 한·러관계에서는 인적 네트워크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편중되어 구축된 경향이 발견된다. 이는 러시아의 동북아·한반도 전문가가 적은 데에서도 비롯될 수 있으나 지역이 아닌 주제 영역별 전문가의 교류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할 만하다. 특히 여전히 많은 영역의 전문가들은 한국보다는 북한에 대한 이해수준이나 친밀도가 높으며, 원로들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특히 우선순위가 낮은 지역일수록 해당지역에 대한 정책이 비교적 소수의 전문가 집단에 의해 형성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러시아 내 한반도 정책에 대한 건전한 토론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네트워크에 포함된 인사들 이외에 신진인력에 기초한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넷째, 영역이나 분야와 무관하게 양국 간에 보다 실효적인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러 간 거대 프로젝트는 양국협력의 기대를 확대해왔으나 이후 실질적인 조치가 부진하면서 양국 간 상호 실망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TSR-TKR 연결이나 가스관 연결 사업은 경제적 손익계산에 기초한 적절한 투자 계획과 성과가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거대 프로젝트는 한 정부의 임기 내 달성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반된 평가가 가능한 정치적 영향보다는 객관적이고 경제사업의 본질인 수익구조가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가스관 연결 사업의 경우도 북한의 통과에 대한 정치적 평가가 상반될 수 있으며, 가스관 연결 시 가스의 안정적 공급 및 가격 경쟁력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미 가스관을 정치적 압력 행사용으로 사용한 전례가 있으며, 체제의 차이를 염두에 두더라도 중국에 공급되는 가격과의 격차가 지나치게 클 경우 이는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양국 간에는 보다 실효적인 경제협력을 통해 실익을 추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sup>8)</sup>

## 바. 제안 6: 공공외교의 기본방향

민주화와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 국가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점차 외교정책에서 국내와 국제의 경계가 낮아지고 있으며, 인터메스틱(interstitial)<sup>9)</sup>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제력이나 군사력과 같은 하드파워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자국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확대할 수 있는 소프트파워를 하드파워와 함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파워 개념도 등장하고 있다. 스마트파워의 요건의 하나로 타국이나 국제무대에서 자국의 입장을 보편적인 세계 시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방식이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이다.<sup>10)</sup> 공공외교는 국가와 국가 간 정부외교로서 할 수 없는 현지 국가의 시민사회를 설득하고, 이를 자국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우호적인 세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문제 영역에서의 공공외교는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

8) 예를 들어 2014년 동계올림픽과 2018년 월드컵에 대비하여 러시아는 철도망 정비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TSR-TKR과 같은 대규모 사업과 의미는 다르지만 오히려 이러한 철도망 정비사업에서의 참여 등 보다 경제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9) 인터메스틱이란 개념은 기본적으로 국내적 이해관계가 국제적 이슈와 분석적으로 분리될 수 없게 혼합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미국의 경우 탈냉전 시기에는 전통적으로 외교안보 정책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의회와 국내 행위자들이 이런 과정에 보다 관여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내정치적 행위자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미국의 외교정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이 개념을 사용하는 학자들의 주장이다. 관련된 초기 연구로는 Bayless Manning, "The Congress, the Executive and Interstitial Affairs: Three Proposals," *Foreign Affairs*, Vol. 55, No. 2 (January 1977), pp. 306~324를 들 수 있고, 탈냉전 시기에 이런 관점을 체계화하려 했던 노력으로는 Michael Minkenberg and Herbert Dittgen, eds., *The American Impasse: U.S. Domestic and Foreign Policy After the Cold War*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96) 및 James M. Scott, ed., *After the End: Making U.S. Foreign Policy in the Post-Cold War World*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8)를 들 수 있다.

10) 스마트 파워의 요소의 하나로서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의 중요성을 지적한 글로서는 Richard L. Armitage and Joseph S. Nye, Jr., "CSIS Commission on Smart Power: A smarter, more secure America"(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2007)를 참조.

한반도 통일 과정에 대한 한국의 입장, 그리고 통일한국 및 동아시아의 비전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 간 대화와 아울러 각국의 학계, 언론계, 경제계, 사회단체 등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를 통해, 우리의 통일정책과 통일 이후의 국가방향에 대해 설득하고 협력의 지면을 넓혀가는 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통일문제 영역에서의 공공외교는 다음의 몇 가지 기본방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반도 통일과 통일한국의 비전에 대한 우리 사회 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공외교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근간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물론 통일 과정 및 통일 영역의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공공외교의 대상이 되는 사회·대중을 설득하게 될 경우 개별국가의 특수이익보다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설득에 유리할 것이며, 공유할 수 있는 장기적 비전 속에서 설득이 이루어진다면 공감을 얻기가 더 용이할 것이다.

둘째, 공공외교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국가의 특성을 고려해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 정책을 적절히 구사할 필요가 있다. 영토분쟁에 대한 자국의 입장이나 영토적 주장을 신문광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국의 입장을 피력하고, 관심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극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인터넷과 SNS의 발전은 이러한 방법이 단순히 소극적인 방법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히려 신문광고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이기도 하다. 적극·소극적인 방법의 적절한 배합은 공공외교의 실효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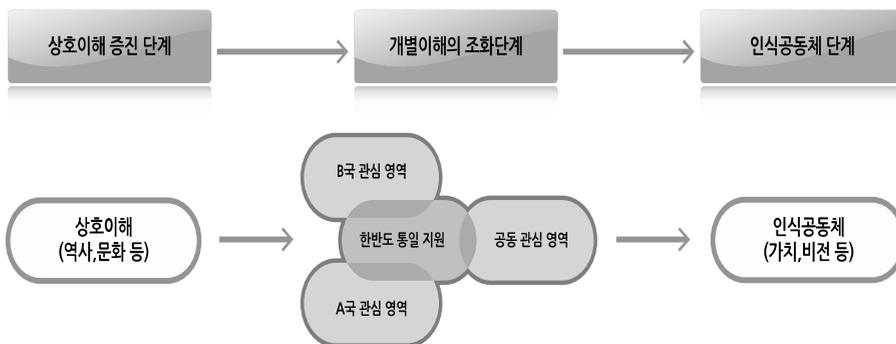
셋째, 공공외교 역시 다양한 네트워크의 구축과 활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미·일·중·러 모든 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며, 민간학자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통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별국가마다 민주화나 시민사회 발전정도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일 수도 있고 역사적 경험이나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대중의 대정부 영향력의 정도가 다를 수 있으며, 공공외교의 강도나 사용할 수 있는 수단 등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중·러와 같이 NGO 활동에 제약이 있거나 외국 정부가 자국민을 직접 접촉하는 것을 국내정치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우 정부 간 논의를 통해 목

적과 수단을 조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공공외교의 필요를 미·일·중·러 모두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호 호혜적으로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특정 국가와의 상호 이해수준 역시 고려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냉전의 영향일 수도 있으나 미·일·중·러에 대한 한국민의 이해수준이나 한국에 대한 이들 국가 국민들의 이해수준은 다를 수 있다. 지난 반세기 이상 동맹관계를 유지한 경우와 단절된 외교관계가 정상화된 지 20여년 정도 지난 러시아나 중국 인들과의 상호이해 수준은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동맹관계라는 것이 반드시 대중의 관심이나 이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특정목적을 위한 공공외교의 경우에도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대체로 공공외교는 상호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기반조성단계와 특정한 개별 이해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과정,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공통의 인식이 확대되는 단계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이러한 단계의 설정은 반드시 공공외교가 순차적 발전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개별화된 특수이익이 보편적인 가치공동체를 지향하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공공외교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일·중·러의 경우 개별국가 내의 한국이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고려해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과 통일에 대한 지지와 이해를 얻기 위한 노력의 비율을 다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 1-1> 통일영역에서의 공공외교의 추진단계



끝으로 한국의 통일관련 공공외교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비전이나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와 관련된 내용을 개별국가의 언어로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장단기를 막론하고 요구되는 것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 4. 기대효과

본 연구는 한반도 통일관련 편익과 통일외교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지역적 차원의 편익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가들의 개별적 편익을 분석하고, 통일외교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제1부는 통일한국의 비전과 지역차원의 편익을 제시하였다. 통일한국의 비전을 정치, 안보, 경제, 사회면에서 제시하여 통일미래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도모할 것이다. 그리고 독일통일이 EU의 통합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단 국가의 통일이 지역적으로 미치는 편익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독일통일의 국제적 편익은 통일한국이 미칠 국제적 편익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한국의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편익을 분석하였다. 통일한국이 동아시아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는 편익을 외교안보적 편익, 경제적 편익, 사회문화적 편익으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통일한국의 국제적 편익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제2부는 통일한국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통일한국이 주변국가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익을 정치·안보분야, 경제분야, 사회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를 대상으로 국가이익의 분석,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려와 우려 해소방안, 그리고 한반도 통일의 편익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네 가지 차원의 변수가 국가이익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일관되게 연결되도록 하였다. 일차적으로 각국의 국가이익을 수준별로 규명함으로써 주변국들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지닐 수 있는 우려와 이익의 성격과 정도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개별국의 국가이익은 사활이익, 핵심이익, 그리고 중요이익으로 구분해 분석하였다.<sup>11)</sup> 그리고 각국의 국가이익에 대한 규명을 통해서 각국이 어떤 국가이익의 관

<sup>11)</sup> 본 연구에서 ‘사활이익’은 유지·획득하지 못하거나 다른 행위자에게 양보할 경우, 해당 국가 또는 국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이익을 의미하며, ‘핵심이익’은 유지·획득하지 못하거나 다른 행위자에게 양보할 경우, 해당 국가 또는 국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지는 않지만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사활이익의 상실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이익을 의

점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해 우려하는지를 분석하고 우려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다음 주변국의 국가이익을 증대시킨다는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익을 발굴하였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려나 편익은 정치·안보분야, 경제분야, 사회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주변국의 우려 해소 및 편익을 종합하여 국가별로 국가이익, 우려사항과 해소방안, 그리고 통일편익을 표로 제시함으로써 일목요연한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통일한국에 대한 개별국가들의 우려 해소를 위해 개별국들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별국가의 편익 분석에서도 국가마다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단기 및 중장기 편익을 구분해 분석하고, 개별국가마다 우선시하는 편익을 부각시킴으로써 개별국 간의 차이와 공통분모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제3부는 통일외교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지역과 개별국가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려와 편익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통일외교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통일외교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지역적 차원에서 통일외교가 어떤 원칙과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둘째, 개별국가별로 통일외교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을 고려하였다. 셋째, 개별국가의 사회를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의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

미한다. ‘중요이익’은 유지·획득하지 못하거나 다른 행위자에게 양보할 경우, 국가 또는 국민의 위신이나 능력이 손해가 올 수 있는 이익을 상정한 것이다.

## 참고자료

### 1. 단행본

- EAI 한미동맹 TASK FORCE. 『변환시대의 한미 안보협력: 미래를 향한 지휘관계 재건축』. 서울: EAI, 2008.
- 김규륜 외. 『통일비용·편익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김성철 편. 『외교환경과 한반도』. 성남: 세종연구소, 2009.
- 김학성. 『남북한관계의 제도적 발전: 이론과 실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2.
- 박순성. 『통일한국의 복지정책』. 서울: 통일연구원, 1994.
- 박원순. 『박원순 변호사의 일본 시민사회 기행』. 서울: 아르케, 2001.
- 박종철 외.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1): 안보전략』. 서울: 통일부, 2007.
- \_\_\_\_\_. 『통일환경 평가』. 서울: 통일연구원, 2010.
- \_\_\_\_\_. 『통일환경평가: 국내요인, 남북한 상대적 역량 요인, 북한 요인, 국제 요인의 종합 평가』. 서울: 늘품플러스, 2011.
- 배정호 외.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 외교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0.
- 빅터 차. 『적대적 제휴: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안보체제』.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4.
- 손기용. 『통합정책과 분단국가 통일: 독일사례』.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여인곤 외.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력 협력 강화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염돈재.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 제주: 평화문제연구소, 2010.
- 이상욱. 『전환기의 한국외교』. 서울: 삶과 꿈, 2002.
- 이종원·황기식. 『EU27 유럽통합의 이해』. 서울: 해남, 2008.
- 이현근.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 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6.
- 임동원. 『피스 메이커』. 서울: 중앙books, 2008.
- 자오치정. 『중국은 어떻게 세계와 소통하는가』. 파주: 나남, 2012.
- 조명철 외. 『비핵·개방·3000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조지프 나이. 『국제분쟁의 이해: 이론과 역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9.
- 최진욱 외.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최태강. 『러시아와 동북아: 1990년대 초 이후러시아의 대(對) 중·일·한·북 외교』. 서울: 오름, 2004.
-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이해 2012』.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2.
- 하정열. 『한반도 통일 후 군사 통합방안』. 서울: 팔복원, 1996.
- 한상일. 『지식인의 오만과 편견: 《세카이(世界)》와 한반도』. 서울: 기파랑, 2008.
- 황병덕 외.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 하권.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_\_\_\_\_.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III』.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Bernstein, Richard and Ross H. Munro. *The Coming Conflict with China*. N.Y.: A.A. Knopf, 1997.
- Callahan, Patrick. *Logics of American Foreign Policy: Theories of America's World Role*. New York: Longman, 2004.
- Giddens, Anthony. *Nation State and Violence*. Oxford: Blackwell, 1995. 진덕규 옮김. 『민족국가와 폭력』. 서울: 삼지원, 1992.
- IMD. *The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2*. 2012.
- Kang, David C. *China Rising: Peace, Power, and Order in East Asia*.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0.
- Kegley, Charles W. Jr. *World Politics: Trend and Transformation*. Belmont: WADSWORTH Cengage learning, 12th, 2009.
- Krauthammer, Charles. *Democratic Realism: An American Foreign Policy for a Unipolar World*. Washington, D.C.: The AEI Press, 2004.
- Kurlantzick, Joshua. *Charm Offensive: How China's Soft Power Is Transforming the World*. Yale University Press, 2008.
- Mattli, Walter. *The Logic of Regional Integration: Europe and Beyond 199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Mearsheimer, John J.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 W. Norton, 2001.
- Minkenberg, Michael and Herbert Dittgen. eds. *The American Impasse: U.S. Domestic and Foreign Policy After the Cold War*.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96.
- Nye, Joseph.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04.
- Pyle, Kenneth B. *Japan Rising: The Resurgence of Japanese Power and Purpose*.

- New York: A Century Foundation Book, 2007.
- Rosecrance, Richard. *The Rise of the Trading State: Commerce and Conquest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Basic Books, 1986.
- Rosstat. *Statisticheskii Ezhegodnik 2011: Statisticheskii sbornik*. Moskva: Rosstat, 2011.
- Rozman, Gilbert. *Northeast Asia's Stunted Regionalism: Bilateral Distrust in the Shadow of Glob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Ruggie, John Gerard. *Multilateralism Matters: The Theory and Praxis of an Institutional For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3.
- Samuels, Richard J. *Securing Japan: Tokyo's Grand Strategy and the Future of East Asia*.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7.
- Sarkesian, Sam C., John A. Williams, and Stephen J. Cimbala. *U.S. National Security: Policymakers, Processes, and Politics*. 4th ed. Boulder, Colorado: Lynne Rienner Publisher, 2008.
- Scott, James M. *After the End: Making U.S. Foreign Policy in the Post-Cold War World*.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8.
- Skidmore, David. *Paradoxes of Power: U.S. Foreign Policy in a Changing World*. Boulder: Paradigm Publishers, 2007.
- Snow, Donald M. *When America Fights: the Uses of U.S. Military Force*. Washington, D.C.: CQ Press, A Division of Congressional Quarterly Inc, 2000.
- Steinfeld, Edward S. *Playing Our Game: Why China's Rise Doesn't Threaten the West*.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 Tow, William T. *Asia-Pacific Strategic Relations: Seeking Convergent Secur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岡本三夫. 『平和學は訴える』. 京都: 法律文化社, 2005.
- 屈全繩, 劉紅松 主編. 『和平演變戰略及其對策』. 北京: 知識出版社, 1990.
- 東京財團 安全保障研究 プロジェクト. 『新しい日本の安全保障戦略: 多層協調的安全保障戦略』. 東京財團政策研究部, 2008.10.
- 東京財團 アジアの安全保障プロジェクト. 『日本の對中安全保障戦略: パワーシフト時代の「統合」「バランス」「抑止」の追求』. 2011.6.
- 新たな時代の安全保障と防衛力に関する懇談會. 『新たな時代における日本の安全保障と防衛力の將來構想: 「平和創造國家」を目指して』. 2010.8.
- 日本經濟団体連合會. 『國家戰略としての宇宙開發利用の推進に向けた提言』. 2010.4.12.

- 日本經濟団体連合會. 『海洋立國への成長基盤の構築に向けた提言』. 2010.4.20.
- 北岡伸一. 『普通の國へ』. 東京: 中央公論新社, 2000.
- 梁云彤, 辛仲勤, 王朝文, 王杏芳. 『美國和平演變戰略』. 吉林: 吉林人民出版社, 1992.
- 閻學通. 『中國國家利益分析』.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1996.
- 添谷芳秀. 『日本の『ミドルパワー』外交』. ちくま新書, 2005.
- 坂本義和. 『核時代の國際政治』. 東京: 岩波書店, 1967.

## 2. 논문

- 고봉준. “경제위기와 미국 대외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현실주의 이론의 관점에서.” 『동향과 전망』. 제76호, 2009.
- 고상두.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과 중국.” 『한국과 국제정치』. 제25집, 1997.
- \_\_\_\_\_. “푸틴의 전방위 외교정책: 제국중후군의 극복.”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1호, 2005.
- 권오운·심정창. “‘협력안보’로서의 동북아 평화협정체제를 만들기 위한 조건들.” 『평화연구』. 제15권 1호, 2007년 봄.
- 김명찬 외. “독일통일과 유럽 통합.” 『독일어문화권연구』. 제6권 제1호, 1997.
- 김성진. “러시아 외교정책의 성격: 상하이 협력기구에 대한 정책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2권 2호, 2008 여름.
- \_\_\_\_\_. “사회안보와 러시아 극동의 이주문제: 연방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1집 3호, 2007 가을.
- 김연규. “글로벌 에너지 아키텍처와 한국의 에너지자원협력 외교 방향.” EAI NSP 연구보고서 57, 2012.
- 김영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6.
- 김창수. “한반도 통일과 미국의 협력 유도 방안.” 최진욱 외.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김태현.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 기대와 현황과 전망.”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 편. 『동북아 공동체를 향하여』. 서울: 동아일보사, 2004.
- 마상윤. “미국의 대외정책과 민주주의 전파: 동기와 딜레마.” 『국가전략』. 제11권 제4호, 2005.
- \_\_\_\_\_. “오바마 행정부의 안보전략과 한미동맹: 현실주의의 역외균형론을 넘어서.” 『국가전략』. 제16권 제2호, 2010.

- 문우식. “교육분야.” 전홍택·박명호 편. 『동아시아 통합전략 (II): 한·중·일을 중심으로』. 2011-07.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1.
- 미치시타 나루시게(道下徳成). “북한 동향과 대북 정책 옵션.” 주일 한국대사관 주최 안보 국방심포지움 발표논문과 그에 대한 필자와의 토론에서. 동경 주일한국대사관, 2011.11.8.
- 박영자. “다문화시대 한반도 통일통합의 가치 및 정책방향: ‘상호문화주의’ 시각과 교훈을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제17권 제1호, 2012.
- 박영준. “동북아균형자’론과 21세기 한국외교.”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서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6.
- 손기용. “독일의 통일 및 군사안보적 위상에 대한 전승 4개국의 입장과 서독의 대응.” 『통일연구논총』. 제5권 제2호, 1996.
- 손 열. “미중관계와 동아시아: 경제 아키텍처를 둘러싼 전략적 경쟁.” 김병국 외. 『미중관계 2025』.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2.
- \_\_\_\_\_. “위기이후 동아시아 다자경제제도의 건축 경쟁: 경제적 상호의존, 네트워크 효과, 안보이익.” 『국가전략』. 제17권 제1호, 2011.
- 신동천·이은국·오재록. “통일비용과 남북협력기금: 독일통일로부터의 교훈.” 『통일연구』. 제12권 제1호, 2004.
- 신상진. “대만문제와 북핵문제를 둘러싼 중·미관계: 동북아 안보위기의 협력적 관리.” 『국가전략』. 제13권 제3호, 2007.9.
- \_\_\_\_\_. “북한과 북핵문제를 바라보는 격차.” 정재호 편. 『중국을 고민하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1.
- \_\_\_\_\_.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동북공정의 의미, 의도, 대응방안.” 『정세와 정책』. 2004년 2월호, 2004.
- 안상욱. “동유럽의 EU가입과정과 EU의 지원.” 한국유럽학회 2011년 12월 부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1년 12월 2일.
- 알렉산더 폰 플라토. “독일의 통일: 유럽을 둘러싼 국제적 권력게임.” 『독일연구』. 제20호, 2010.
- 염돈재. “독일통일과 EU.”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 및 역할』. 배정호 편.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원동욱. “동북아, 협력과 공생의 아젠다: ‘교통물류’ 분야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21권 제1호, 2009.
- 이 경. “분단국가의 통일사례 비교: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대한정치학회보』. 제18권 제3호, 2011.
- 이동선. “미중 군사관계 2025.” 김병국 외. 『미중관계 2025』.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2.

- 이성규.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참여 방식.” 『KDI 북한경제리뷰』.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1. 10
- 이승주. “복합 네트워크화와 동아시아 지역주의.” 하영선·김상배 엮음. 『복합세계정치론: 전략과 원리 그리고 새로운 질서』.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2.
- 이재문. “러시아 극동지역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황화론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4권 1호, 2000.
- 전재성. “외교.” 하영선·조동호 공편. 『북한 2032: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0.
- 정용길. “통일 전후의 동·서독 및 주변국 관계가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7권 제2호, 2007.
- 정희석. “러시아적 범슬라브주의의 유형과 역사적 전개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34권 2호, 2000.
- 조동준 외. “공진화를 위한 통일외교: 인식공동체 창출을 위한 외교방안.” 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 발표논문, 2012.
- 조 민. “한반도 통일의 의의 및 전망.” 『독일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서울: 통일연구원, 2010.
- 조철호. “초국가적 동북아 철도네트워크의 기원과 성격: 시베리아 횡단철도 건설과 군사적 제국주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3집 1호, 2011.
- 최영중. “동아시아의 다자주의, 다자외교, 다자제도.” 화정평화재단 21세기 평화연구소 편 『다자외교 강국으로 가는 길』. 서울: 동아일보사, 2009.
- 최 흥. “기रो에 선 중국동포정책의 현안과 해법.” 『SERI 경제포커스』. 제348호, 2011.8.16.
- 통일연구원·한국전략문제연구소 외.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중간보고회 자료집(I).” 2011년 3월 31일.
- 한관수. “제8장 독일의 전승4개국에 대한 통일외교 재조명.” 『통일전략』. 제11권 제3호, 2011.
- 한석희. “ARF와 중국: 중국의 안보적 구속에 대한 논의.” 『국제정치논총』. 제42집 4호, 2002.
- 현대경제연구원. “통일한국의 미래상: 한민족 공동체의 세계적 부상.” 『Weekly Economic Review 12-29』. 통권 제500호, 2012.8.10.
- 홍현익. “‘안’과 ‘밖’의 합성으로서의 러시아 외교정책 결정.”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논문집, 1998.
- 황기식. “중동부유럽 체제전환 국가에 대한 EU의 지원 경험과 한반도의 시사점.” 『유럽연구』. 제29권 제3호, 2011.
- Armitage, Richard L. and Joseph S. Nye, Jr. “CSIS Commission on Smart Power:

- A smarter, more secure America.”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2007.
- Armitage, Richard L. and Joseph S. Nye. “U.S.-Japan Alliance: Anchoring Stability in Asia.”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August 2012.
- Athukorala, Prema-chandra. “Production Networks and Trade Patterns in East Asia: Regionalization or Globalization?.” *ADB Working Paper Series o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No. 56, 2011.
- Brooks, Stephen. “The Globalization of Production and the Changing Benefits of Conques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3, No. 5, 1999.
- Cha, Victor. “Complex Patchworks: U.S. Alliances as Part of Asia’s Regional Architecture.” *Asia Policy*. No. 11, January 2011.
- Clinton, Hillary.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November 2011.
- Cossa, Ralph A. and Brad Glosserman. “The Illogic of China’s North Korea Policy.” *PacNet*. No. 32, May 17, 2012.
- Denisov, V. “Nuclea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International Affairs* (Moscow). Vol. 50, No. 6, 2004.
- Gilson, Julie. “Complex Regional Multilateralism: ‘Strategising’ Japan’s Responses to Southeast Asia.” *The Pacific Review*. Vol. 17, No. 1, 2004.
- Grieco, Joseph M. “Systemic Sources of Variation in Regional Institutionalization in Western Europe, East Asia, and the Americas.” Edward D. Mansfield and Helen V. Milner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7.
- Gruber, Lloyd. “Power Politics and the Free Trade Bandwagon.”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34, No. 7, 2001.
- Gu, Guoling. “Redefine Cooperative Security, Not Preemption.”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26, No. 2, 2003.
- Gupta, Eshita. “Oil Vulnerability Index of Oil-Importing Countries.” *Energy Policy*. Vol. 36, 2008.
- Haggard, Stephen and Marcus Noland. “A Peace and Security Mechanism for Northeast Asia: The Economic Dimension.” *The Pacific Review*. Vol. 22, No. 2, 2009.
- Hartung, William D. and Michelle Ciarrocca. “Tangled Web: The Marketing of Missile Defense 1994-2000.” *Arms Trade Resource Center Special Report*. May 2000.

- Helmke, Gretchen and Steven Levitsky. "Informal Institutions and Comparative Politics: A Research Agenda." *Perspective on Politics*. Vol. 2, No. 4, December 2004.
- Jervis, Robert. "Understanding the Bush Doctrine."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18, No. 3, 2003.
- Katzenstein, Peter J. and Okawara, Nobuo. "Japan, Asian-Pacific Security, and the Case for Analytical Eclecticism." *International Security*. Vol.26, No.3, Winter 2001/02.
- Kim, Won Bae. "Sino-Russian Relations and Chinese Workers in the Russian Far East: A Porous Border." *Asian Survey* 34, No. 12, December 1994.
- Kissinger, Henry A. "The Pitfalls of Universal Jurisdiction: Risking Judicial Tyranny." *Foreign Affairs*. Vol. 80, No. 4, 2001.
- Kwon, Goohoon.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 (Part I)." *Global Economic Paper*. No. 188, September 21, 2009.
- Lankov, Andrei. "Changing North Korea." *Foreign Affairs*. Vol. 88, No. 6, Nov/Dec 2009.
- Larin, Victor. "Chinese in the Russian Far East: Regional Views." Tsuneo Akaha and Anna Vassilieva. eds. *Crossing National Borders: Human Migration Issues in North Asia*. New York: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2005.
- Levy, Jack S. "Loss Aversion, Framing, and Bargaining: The Implications of Prospect Theory for International Conflict."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7, No. 2, April 1996.
- Liberti, Fabio. "Defence spending in Europe: Can we do better without spending more?." *policy paper* 46. Notre Europe, June 2011.
- Malcolm, Neil. "New Thinking and After: Debate in Moscow about Europe." Neil Malcolm. ed. *Russia and Europe: An End to Confrontation?* London: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94.
- Manning, Bayless. "The Congress, the Executive and Intermestic Affairs: Three Proposals." *Foreign Affairs*, Vol. 55, No. 2, January 1977.
- Maynes, Charles. "Two Blasts Against Unilateralism." Glyn Prins (ed) *Understanding Unilateralism in American Foreign Relations*. London: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2000.
- Mearsheimer, John J. "The Gathering Storm: China's Challenge to US Power in Asia."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3, 2010.
- \_\_\_\_\_. "China's Unpeaceful Rise." *Current History*. 2006.

- NATO. "Financial and economic data relating to NATO defence." PR/CP press release (2009). February 19, 2009.
- Posen, Berry R. and Andrew L. Ross. "Competing Visions for U.S. Grand Strateg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1, No. 3, Winter 1996/7.
- Rice, Condoleezza. "Promot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Vol. 79, No. 1, Jan/Feb 2000.
- Shambaugh, David. "Change Engages Asia: Reshaping the Regional Order." *International Security*. Vol. 29, No. 3, 2004/5.
- Soeya, Yoshihide. "Japan's Security Policy toward Northeast Asia and Korea: From Yukio Hatoyama to Naoto Kan."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국제심포지움 발표논문, 2010.7.12.
- Sun, Xuefeng. "The Efficiency of China's Multilateral Policies in East Asia (1997-2007)."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 10, 2010.
- The White House.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 July 1994.
- \_\_\_\_\_.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ptember 2002.
- \_\_\_\_\_.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arch 2006.
- \_\_\_\_\_.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ay 2010.
- The World Bank. "China 2030: Building a Modern, Harmonious, and Creative High-Income Society." 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the State Council,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2.
- Tsygankov, A. P. "Mastering Space in Eurasia: Russia's Geopolitical Thinking after the Soviet Break-up."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36, No. 1, March 2003.
- U.S. Department of Defense.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 January 2012.
- U.S. Joint Chiefs of Staff. "The National Militar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defining America's Military Leadership." February 2011.
- Von Hippel, David, Ruslan Gulidov, Victor Kalashnikov, and Peter Hayes. "Northeast Asia Regional Energy Infrastructure Proposals." *Energy Policy*. Vol. 39, 2011.

- Yoshimatsu, Hidetaka and Dennis D. Tridad. "Development Assistance, Strategic Interests, and the China Factor in Japan's Role in ASEAN Integration."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11, No. 2, 2010.
- Yun, Won-Cheol and Zhong Xiang Zhang. "Electric Power Grid Interconnection in Northeast Asia." *Energy Policy*. vol. 34, 2006.
- Zhang, Liangui. "Coping with a Nuclear North Korea." *China Security*. Autumn 2006.
- Zhu, Feng. "Shifting Tides: China and North Korea." *China Security*. Autumn 2006.
- "Deutsche Einheit." *Dokumente zur Deutschlandpolitik*. Vol. 90, München: Oldenbourg, 1989.
- "Russian Foreign Policy Concept." *International Affairs*. vol. 39, no. 1, 1993.
- "The Commission on America's National Interests." *America's National Interests*. July 2000.
- 郭憲綱. "韓美同盟尋求新定位." 『國際問題研究』. 2006年 第3期, 2006.6.
- 金景一·金強一. "朝鮮半島的地緣政治意義及其對我國的影響研究." 『中國外交』. 2008年 第11期, 2008.11.
- 東清彦. "日韓安全保障關係の変遷: 國交正常化から冷戦後まで." 『國際安全保障』. 제33 권 제4호, 國際安全保障學會, 2006.3.
- 鄧小平. "目前的形勢與任務." 『鄧小平文選, 1975-1982年』. 北京: 人民出版社, 1983.
- 落合浩太郎. "北朝鮮の急変事態予測と各國の対応." 第8回 RIPS公開セミナー. 『変化する東アジアの戰略環境への対応』. 財団法人平和安全保障研究所, 2010.9.8.
- 徐堅. "和平崛起是中國的戰略抉擇." 『國際問題研究』. 2004年 第2期, 2004.3.
- 汪偉民, 李辛. "美韓同盟再定義與韓國的戰略選擇: 進程與爭論." 『當代亞太』. 2011年 第2期, 2011.3.
- 王毅. "與隣爲善, 以隣爲伴." 『求是』. 2003年 第4期, 2003.4.
- 章迪禹. "國家利益認知的中國之路." 『世界知識』. 2011年 第19期, 2011.5.
- 章迪禹. "歷史性突破: 中國首次界定核心國家利益." 『世界知識』. 2011年 第19期.

